

“모든 언행, 깊이 사과”… 딸 특혜·사모펀드 의혹 부인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젊은세대·국민께 실망끼쳐 죄송
딸 인턴경력, 제발로 찾아한 것
사모펀드 전혀 관여 안해 ‘일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견을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딸 논문·부정입학 의혹 ▲웅동학원 비위 운영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연루 의혹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조 후보자는 먼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최근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딸이) 서울대 장학회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딸은 이후 단국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간 상

태에서 휴학했고, 딸에게 ‘휴학한 것에 대해 장학금 반납해야 하지 않는지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학회 측에선 ‘한 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하다’고 얘기했다는 게 조 후보자 부연이다.

이어 딸의 논문 제1저자 기재 등에 대해선 “담당교수나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인턴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것은 아비로서 과도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가 당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흠수저 청년과 유학 못 간 청년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딸 아이가 혼자 사는 집 앞에서 언론이 지금도 밤 늦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저는 물론이고 제 아내도 (사모펀드) 구성과 운영 과정 등을 알 수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펀드를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에 따르면 민정수석 취임 후 개별주식 보유가 불가하다는 규칙상 5촌 조카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맡겼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는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정부에서 펀드는 가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신고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 후보자 두 자녀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에 대해선 “부인이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어떤 평가도 제 입으로 나오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노딜 브렉시트 이전에 韓·英 FTA 비준 완료”

산업부, 협상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예정일인 10월 말 이전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한·영 FTA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에서 “브렉시트 상황 변화와 영국의 비준 절차 진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한영 간 통상관계의 단절을 예방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추진해왔다.

2016년 말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6월 FTA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고 지난 달 22일 양국이 한·영 FTA 정식 서명을 하면서 양국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한·영 FTA는 기존 한·EU와 같은 수준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브렉시트 진행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영국과의 교역과 투자 활동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중에서는 영국과 FTA를 맺은 유일한 나라이며 10월 말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경쟁국 대비 비교 우위가 기대된다.

다만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조치 협정이기 때문에 발효 후 2년 내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 협상을 개시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석대성 기자

산업부 뿌리기술·산업 범위 추가 지정 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부터 한달동안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에 추가할 기술·산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IT) 등 국가기간산업인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업종을 지정한다.

뿌리기술이나 산업 범위에 추가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 또는 업종 단체는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접수한 의견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부 고시 형태로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기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따라 가지 못한 경직적인 입법 방식을 미래 수요 등 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포괄적인 입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석대성 기자

“일회성 연구 벗어나 장기적 R&D 체계 구축”

최기영 과기정통부 후보자 청문회

산업부·중기부 등 타부처와 협력 예산 과감히 늘려 기초과학 강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영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느냐”고 최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를 말하긴 힘들다”며 “연구 윤리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전공 분야가 다르고 기본적인 판단은 연구기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문제냐”며 “많은 연구자들이 최 후보자 답변을 듣고 또 왜곡하겠구나 하겠다.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얘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의 것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역량 검증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전형적인 연

구에 몰두하는 학자시다”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전체를 살펴 혁신을 해야 한다. 현장 연구자들과의 소통과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의지는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직원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수렴해 좋은 정책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며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일하는 것을 만들어 조직 장악력 생기고 좋은 정책을 펼 것”이라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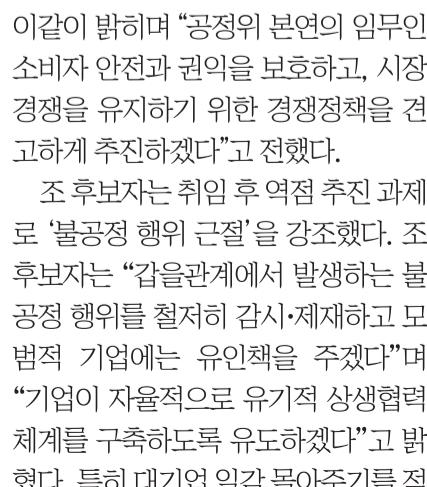
한편, 최 후보자는 일회성 연구·개발(R&D)에서 벗어나 산업과 연계되는 장기적인 R&D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부나 중기벤처부 등 타 부처와 칸막이를 없애고 유연성 있는 협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최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으로도 자랑스러운 국가가 될 수 있게 기초 R&D(연구개발) 예산을 과감히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

“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모범기업엔 유인책”

조성욱 공정위 후보자 청문회

유기적 상생협력토록 체계 구축
시장경쟁 유지 위한 정책 만들 것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 후 역점 추진 과제로 ‘불공정 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제재하고 모범적 기업에는 유인책을 주겠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기적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적

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겠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조 후보자는 이어 “소재·부품·설비 산업 등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대기업이 혁신적 중소기업을 발굴해 성장 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 시 공정위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정보통신기술(IC 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 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하겠다”고 전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